

“광주에서 결단해 달라” vs “지역 불모정치 끝내 달라”

여야 거물 여성 정치인
박영선·나경원 호남 지원 유세
‘돌아오는 호남’ 되도록 혼신
‘민주 독점 호남 낙후’ 안돼



“이재명 지지해 달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선회원위원장이 지난 28일 광주 송정오일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원유세를 마친 후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윤석열에 한 표를”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광주 송정오일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후보 지원유세를 마친 후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여야의 거물 여성 정치인들로 꼽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광주·전남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선회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전 장관은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원 유세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광주와 전남을 돌며 윤석열 후보의 지원 유세를 벌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과 남구 푸른길 공원, 전남대 후문 등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유세를 통해 “코로나 방역하느라 불편을 드렸고, 부동산 문제 잘못했다.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사과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결단해줘야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면서 “위기의 시대에는 일할 줄 아는 인물이 필요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대형복합소 평물로 논란만 가져오고, 광주가 GRDP 꼴찌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선동과 거짓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이는 호남표를 흔들어 권력만 잡아보겠다는 공작정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서민 형편에 대한 사려 깊은 공감이나 고민 없이 선동이나 공작정치가 아닌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지역을 떠나고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도시로 떠나는 ‘떠나는 호남’을 막아야 한다”면서 “젊은이들이 살고 싶고, 일자리가 넘치고, 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돌아오는 호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화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풀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서 “이를 철저히 뒷받침해 광주가 디지털 도시, 선도도시로 발전해 ‘돌아오는 호남’의 중심이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찾아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호남 유세에 나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내놓는 ‘민주당 독점 호남 낙후론’을 꺼내 들며 지역 불모 정치를 끝내달라는 게 유세 키워드였다.

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송정시장에 이어 오후에는 화순에서 유권자들과 만났다.

그는 오후 1시 30분 화순을 고인들 전통시장 앞 거리에 세워진 국민의힘 유세차량에 올라 “호남분들, 광주와 전남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국민의힘

이 노력했으나 부족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도 부족하지만, 윤석열 후보에게서 희망을 보고 있다. 윤 후보의 호남 방문과 호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라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높게 사igo 계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의 민주당, 김대중의 민주당이었다면 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저격했다. 반면 경선에서 무릎 꿇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훌륭한 장점이 많은 분이고 민주당 후보로 납득이 가능한 분”이라는 취지로 치켜세우

며 이재명 후보 저격을 이어갔다. 나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대상지가 화순임을 강조하면서 “아무래도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의 공약을 (새 정부가) 우선에 두고 추진하지 않겠냐”며 “전남과 광주의 아들딸들이 타지역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가지 않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역 불모 정치를 끝내도록 그 싹을 화순에서부터 퇴출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내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한다

‘깜깜이 기간’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대선 6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올해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시간이 1시간30분 늘어났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투표자가 승산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의 편을 드는(언더독 효과)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 왔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배경이다.

오는 3일은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90일 전이기도 한데, 이날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나 의정 보고회도 금지된다.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3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그만뒀어야 한다.

/연합뉴스

선관위 “문대통령 ‘尹 적폐수사 분노’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특정 후보자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참모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련 금지 등)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지난 10일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문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누가 되도 통합정치 안하면 성공 정부 힘들어”

윤여준·법륜 등 사회·종교원로 20인 국민통합 연합정부 제안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사회·종교계 원로 인사가들이 1일 차기 정부에 통합내각 구성 및 개헌 추진 등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추진위원회’는 이날 광화문 달개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종교사회 원로들의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언론사에 보낸 제안문에서 “선거운동이 가열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비전과 정책이 제시되보다 서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본질은 만일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의회의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정치적 독주를 계속할지 모르고 반면,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선 이후 우리 정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은 주요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경쟁했던 다른 정당 및 그 후보들과 협력하는 것”

이라며 “단연컨대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후보에게 “당선증을 받은 즉시 인수위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준비 기구를 구성하고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모든 국민의 선택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책임총리를 비롯하여 초당적 내각을 구성할 것”과 “국민통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 정치 대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약속을 TV토론회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진위원으로는 윤 전 장관과 법륜스님 외에 소설가 김홍신씨,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최상용 전 주일대사, 도법 조계종 전 화쟁위원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박경조 성공회 주교 등 총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안은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정치개혁을 고리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제3세대 연대를 모색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